"보복성 인사 절대 없다"

박광태 광주 시장·구청장 등 민주당 당선자 합동기자회견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구청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 5·31 지방선거 광주지역 당선자들은 8일 "군림하는 리더가 아닌 받들고 섬기는 일꾼으로서 충실한 심부름꾼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장 당선자들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복 인사와 관련, "화합을 지향하며 구정을 이끌겠다"며 "보복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소속 당선자 전원은 자만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몸을 낮춰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며 "광주시민들의 성원과 은혜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잘사는 광주' '부자 광주' '일등 광주' 건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선거기간 동안 표출됐던 갈등과 앙금을 해소, 화합의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들의 성원과 애정에 힘입어 민주당이 호남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 정통 민주세력으로서 정권 재창출의 대업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은 이날 특히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1당 독주' 우려와 관련, "겸손하고 몸을 낮추고 일로써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1당 의회'와 '1당 집행부'에서 우려되는 오만함은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 불식시키는 등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정무부지사 인사와 관련, "(인사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4년 전 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정부에서 (정무부시장)을 모시고 온 것이 예산확보와 투자유치 등에 있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만약 본인(정무부시장)의 뜻에 따라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4년 전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정무부시장 인선을 정부 고위 관료에서 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보복 인사 우려와 관련, 송광운 북구청장 당선자는 "단체장의 역할은 화합 속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사적 감정에서 구정을 이끌지 않고 대의를 좇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갑길 광산구청장 당선자는 "송 당선자와 전반적인 의미에서 뜻을 같이한다"면서도 "개성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전 당선자는 또 "원칙을 소중히 여긴다"며 "합리적 안이나 구민이 바라는 바를 잘 알아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등 5·31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자 30여명은 8일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몸을 낮춰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민참여 폭 넓혀 '1당 독주' 우려 불식
"호남 대변자로 정권 재창출 이뤄낼 것"

나이지리아 피랍 한국인 5명 석방

나이지리아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근로자 5명이 8일 밤(한국시간) 석방됐다.

8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니제르델타해방운동'(MEND)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알하지 아사리(무자히드 도쿠보 아사리)의 요청에 따라 5명의 한국인들을 오늘 오후 2시(현지시간·한국시간 밤 10시) 이전에 석방했다"고 밝혔다.

MEND는 그러나 "대우를 포함한 모든 석유 관련 회사들이 니제르 델타 지역을 떠날 것을 경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격렬한 행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END는 지난 7일 하커트항 인근 가스플랜트에서 대우건설 등 한국인 근로자 5명을 납치한 뒤 산유지인 니제르 델타 분리 운동을 벌이다 반역죄로 수감중인 아사리와 한국인 인질들을 교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지난 7일 새벽 0시 30분께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었다. 납치된 근로자는 대우건설 3명,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각 1명 등 한국인 5명이다. /연합뉴스

이라크 저항세력 최고지도자 납치·자살 폭탄테러 등 주도

■ 알-자르카위는 누구?

이라크 정부가 8일 사망했다고 발표한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40)는 2004년 이라크에서 본격화된 외국인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자르카위는 그 해 6월 발생한 김선일씨 납치사건의 주범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은 자르카위가 각종 저항테러를 주도해 전후 이라크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이라크 내 알-카에다 조직 수장이라고 지목하며 2천500만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해 왔다.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자르카위는 요르단 자르카에서 독실한 무슬림인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옛 소련군의 철수로 아프간 전쟁이 끝나고 1992년께 요르단으로 귀국한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이삼 바르카위의 사상에 빠져 과격 이슬람 운동에 참여했다가 폭발물 소지 혐의로 붙잡히게 된다. 자르카위는 알-카에다 최고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과는 아프간에서 인연을 맺었고, 2004년에는 빈 라덴에게 충성맹세를 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1999년 요르단 압둘라 왕의 즉위에 따른 사면으로 7년간의 수감생활 후 풀려난 자르카위는 한동안 고향에서 가족들과 지내다가 파키스탄과 아프간을 거쳐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이라크 북부 쿠르드 산악지역으로 숨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극을 주도한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의 지도자로 자르카위가 부상했고, 그는 그 이후로 이라크 치안불안을 극대화시킨 여러 건의 납치테러와 수많은 자살폭탄 공격을 주도하는 저항세력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카이로=연합뉴스

■한미 FTA 협상 중간점검

쌀·개성공단 물품 특혜관세 난항

금융분야 진척·자동차 세제 협상대상 인정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7일로 사흘째를 넘어섰다. 쌀을 포함한 농업분야 개방 여부와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등 우리측 최대 현안에 대해선 양국간 입장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선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상태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로 진행된 사흘간의 협상 결과다.

◇**농업**=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둘 것이냐와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제도의 운영방식이 쟁점이다.

우리측은 국내 취약분야인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거나 TRQ 제도를 통해 미국 농산물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쌀 시장도 문을 열어야 하며 TRQ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수준으로 노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퍼블릭 커뮤니케이션'(노동분쟁 해결에 이의가 있을 때 일반 국민이 상대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제도의 도입 여부와 국내 노동법 집행 실패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개성공단. 원산지**=우리측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역외가공' 방식을 준용해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을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개성은 북한의 영토로 한미 FTA 협상대상이 아니며, 심지어 핵·위폐·인권 문제 등 북미 관계까지 거론해 반대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미국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등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한다는데 의견이 접근된 상태다. 다만 우리측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의 허가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자동차**=자동차 세제, 자동차 표준, 소비자 인식 등 3개 분야를 놓고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자동차 세제를 가격 또는 연비 기준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자동차세가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제 문제가 협상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관련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시장**=미국은 신약 허가시 특허문제를 사전에 연계하고 특허보호기간에는 복제약의 허가를 금지하며, 급성 전염병이 퍼졌을 때 국가가 특허권을 강제로 파기하고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강제실시권'을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은 건강보험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한전직원 가족과 함께 이주 않겠다" 50%

영어 마을·실버타운 등 조성땐 긍정적
나주 혁신도시 최상 마스터 플랜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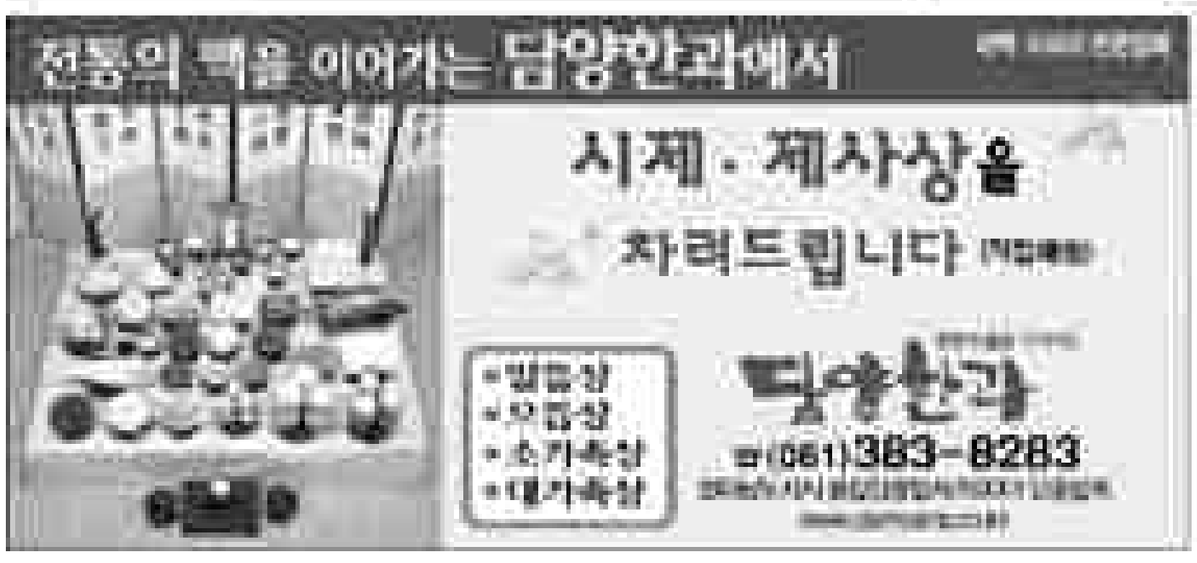
나주에 건설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의 직원 중 절반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꼭 가족과 같이 옮겨오겠다'는 직원은 2명(1.9%)에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영어 마을' 조성과 학습환경 제고, 요양 및 실버타운이 설치 될 경우는 '가족과 이사오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 이를 혁신도시 개발구상 및 실시계획 수립부터 적극 검토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지리학회(회장 이정록 전남대교수)가 지난 달 광주·전남 이전 대상 17개 공공기관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나주 혁신도시 거주 및 정착에 대한 태도 조사'를 벌여, 1차적으로 한전 본사 직원의 답변(106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 중 반드시 가족과 함께 이주하겠다는 사람을 포함,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11명(10.4%)에 불과했다.

직원에 대한 이주 유인책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영어 마을' 조성으로 나타났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한전 직원 중 가족과의 이주를 긍정적으로 고려한 사람들은 10%에 불과하며, 회사 여건이 한전 보다 못한 다른 공공기관 직원들은 거의 가족과의 이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직원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족들이 동반 이주해야 하는 만큼 혁신도시 구상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상의 마스터 플랜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